손 발 묶인 국정, 무력감인가

■ 盧대통령 '임기 발언' 배경과 파장

노무현 대통령이 28일 공개적으로 "임기를 다 마치지 않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것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지명 철회 결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느낀 국정 수행의 심각한 위기 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 대통령이 이날 열린우리당 당적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과 관련, 정치권에서는 노 대통령의 탈당 및 중립내각 구성 등 다양한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물론 이날 국무회의에서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의지를 되새겼지만, '임기를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강도높은 발언은 사실상 '식물 대통령'으로서의 무력감을 토로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치권 반발 대통령 한계 실감

지난해 지난해 가을 노 대통령은 여소야대 정치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대연정(大聯政) 제안을 내놓았지만 정치권의 반발로 좌절되고, 올들어서도 각료급 인선과정에서 여당과의 충돌이 잇따랐으며 국회에서는 의욕적으로 추진한 개혁 법안들이 야당의 반대에 꽁꽁 묶였다.

특히 정국 현안의 일괄타결을 위해 노 대통령이 직접 협상 테이블에 나서는 '여·야·정 정치협상' 제안도 한나라당으로부터 즉각 거부당한 것은 물론 사전 조율 미비 등으로 당·청 갈등이 심화되는 등 국정 운영의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평가다.

여기에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의 지명 철회는 대통령 인사권의 붕괴로 이어졌다.

노 대통령이 각료 후보자의 결정적 하자가 아닌 '정치적 현실'을 이유로 인사를 철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후의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권마저 거둬들였다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 권력의 한계를 인정한 셈이며 이는 곧 레임덕 현상(임기말 권력 누수)의 가속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노 대통령이 느끼는 부담은 상상 이상이었다는 분석이다.

한편, 노 대통령이 이날 열린우리당 당적 포기 가능성을 시사한 점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여당에 대한 경고는 물론 또 다른 정치구상이 깔려있지 않느냐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 대통령이 이날 당적포기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고, 우리당은 노 대통령의 정치개입 중단을 정면으로 요구하고 나섬으로써 당.청은 결별을 위한 외길수순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여당내 통합신당파와 친노 그룹사이의 결별론은 크게 확산될 전망이다.

제2의 대연정 등 승부수 관측도

특히, 노 대통령의 발언은 여당의 통합신당 논의 등과 맞물려 향후 정계개편 과정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노 대통령이 전격적인 탈당을 통한 중립내각 구성, 제2의 대연정 구상 등 정치적 승부수를 걸 것이라는 관측들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고립 무원의 처지에 놓인 대통령은 '올인'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민생법안 처리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이거 안 받아주면 그만둔다'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분석했다.

한편, 노 대통령의 전효숙 후보자 지명철회로 국회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됐으나, 한나라당은 정치협상회의 제안 거부 입장을 고수한채 이재정 통일장관, 정연주 KBS 사장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공을 계속하고 있어 정기국회 막바지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국방개혁법, 노사관계법 등 계류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신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전면에 내걸 태세여서 난항이 예상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노 대통령의 당적·임기 관련 발언록

2003년

▲"전부 힘으로 하려 하니 대통령이 다 양보할 수도 없고, 이러다 대통령직을 못해 먹겠다는 생각이, 위기감이 든다" (5월21일, 5·18 행사추진위 간부들과의 면담에서)

▲"수사가 끝나면 그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이 문제를 포함해 그동안 축적된 국민 불신에 대해서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겠다"(10월10일, 최도술 SK비자금 수수의혹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2005년

▲"국회가 지역구도 문제의 해결에 동의한다면 대통령이 가진 권한의 절반 이상을 내놓을 용의가 있다"(7월6일, 대통령 서신에서)

▲"우리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한다면 대통령 권력을 내놓겠다. 내각제 수준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할 용의가 있다"(7월7일,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정권을 내놓더라도 선거제도 고치고 싶다"(7월29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이) 권력을 통째로 내놓으라면 검토하겠다."(8월25일, KBS '참여정부 2년6개월, 대통령에게 듣는다' 프로그램에서)

▲"2선 후퇴나 임기단축을 통해서라도 노무현 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의지와 결단도 생각해봤다"(8월30일, 열린우리당 의원 초청 만찬간담회에서)

2006년

▲"대연정을 제안한 이후 당에 피해를 입히는 것 같아 당시 당 지도부에 탈당 얘기를 꺼낸 적이 있다."(1월11일, 열린우리당 지도부 초청 만찬간담회에서)

▲"대통령 임기 5년이 긴 것 같다." (2월26일, 취임3주년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북악산 산행에서)

▲"선거 참패후 당이 이렇게 어렵게 됐는데 떠나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 당적을 유지하겠다"(6월3일, 5.31 지방선거 참패 직후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전의장, 김한길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만일 당적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까지 몰리면 임기 중에 당적을 포기하는 네 번째 대통령이 될 것이다. 가급적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지만 그 길 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다만 임기를 다 마치지 않은 첫 번째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11월28일, 국무회의에서 전날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철회한 데 대한 심경을 밝히며)

노무현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의 정치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당-청 결별만 남았다

대통령 당적 포기 시사 '제 갈길 가기'

당 "청와대 독자 행보 결국 파경 불러"

노무현 대통령의 당적 포기 시사로 당·청 관계가 최악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26일 청와대의 여야정 정치협상회의(정협) 제안에 이어 27일 김근태 의장의 청와대 만찬 거부, 청와대의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 철회, 그리고 노 대통령의 당적 포기 시사 언급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긴박한 흐름 속에 여당 내에서는 노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가 김 의장의 면담요청을 번번이 거절하는 등 당을 추인기구 정도로 취급하는 태도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불쾌감이다.

이는 당·청간 파경을 예고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 의장은 지난 25일 노 대통령의 면담 거부에 데 대한 불만으로 "당·청이 한 몸으로 갈지, 중립내각으로 갈지 판단할 시점이 됐다"며 내달 9일까지 결론을 내달라고 청와대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답은 정협 제안과 당적 포기 시사 등이었다. 노 대통령이 '제갈길 가기'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의 대부분 의원들도 '마이 웨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에 대한 불만이 높기 때문이다.

한 비대위원은 "말로는 당정분리라고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보다 더 군림하려 했다. 청와대 비서진의 생각은 역대 당의 총재가 갖는 생각보다 더하다"고 비판했다.

우윤근 의원은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긴밀하게 의논해야 하는데 청와대가 오직 마이웨이로만 간다"며 "레임덕이 오고 있어 협조를 요청해도 부족할 판에 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봉주 의원은 "대통령은 신문 1면을 장식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식의 말의 정치는 옳지 않다"며 "토요일부터 3일 동안 당과 사전에 전혀 상의가 없는 대통령의 독자 행보가 결국 파경을 불렀다"고 이번 파탄의 근본책임이 노대통령에게 있음을 지적했다.

하지만 친노계열 의원들은 이들과는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당·청 갈등이 당내 갈등으로 확산되면서 정계개편의 회오리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다보는 의원들도 늘고 있다.

대표적 친노 의원인 서갑원 의원은 "헌재소장 임명이나 3천 건에 달하는 법안 처리도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고 당이 해결해 주지 않으니 나설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그런 문제만 아니면 대통령이 왜 나서겠느냐"고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하는 비노-반노성향 의원들을 성토했다.

김형주 의원은 "의원들 나름대로 개인적인 입장 조율 차원을 넘어 감정적으로 (탈당 요구로) 대결하려 한다면 중대한 국면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선호 의원도 "다들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이제는 독자생존의 모색이 필요한 상황까지 왔다"며 "정치와 정책을 분리해서 정치는 당이 책임지고 정책을 대통령이 지켜가는 식으로 역할분담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치적 승부수' 던질까

盧대통령 오늘 목포 방문

노무현 대통령이 29일 서남해안 개발 구상의 축인 목포와 무안을 방문, 어떠한 언급을 할 것인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 대통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임기 문제를 거론한 것은 물론 당적 포기를 시사했다는 점에서 여권의 지역적, 정치적 기반이었던 전남을 방문, 추후 정국 구상의 단초를 밝히지 않느냐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목포대학교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누리사업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한다.

이후 노 대통령은 무안에서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 박준영 전남지사, 정종득 목포시장, 서삼석 무안군수 등과 오찬을 갖는다.

이 과정에서 노 대통령은 이날 서남해안 개발 사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천명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노 대통령이 이날 오찬장에서의 질의 응답을 통해 현 정국 상황에 대한 입장표명과 함께 28일 국무회의 발언에 대한 해명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목포와 무안 등 전남은 사실상 여권의 정치적·지역적 기반이었다는 점에서 허심탄회한 입장에서 노 대통령이 정치적 소회를 밝힐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호남은 추후 정계개편의 핵이라는 점에서 노 대통령이 이날 방문을 통해 추후 정국 구상의 화두를 던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인 노 대통령이 목포 방문을 통해 또 다른 정치적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